

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

김 정 식
(연세대 경제학부)

목 차

- I. 경기활성화 방안
- II. 부동산 가격안정과 가계대출
- III. 소득 불공평과 복지
- IV. 대외경제정책 방향
- V. 정책 성공을 위한 선택

1. 경기 활성화 방안

경기침체의 원인

- (1) 산업구조 변화 : IT 산업화, 정보화
- (2) 기업의 R&D 부족 : 수익모델이 없음
- (3) 기업투자환경 열악 : 수출과 내수의 고리 끊어짐
 - 북핵, 노사분쟁, 반기업정서, 정부기업규제
 - 고금리, 저환율, 고유가, 높은 법인세율로 수익감소
- (4) 조기퇴직: 소비감소와 투자부진의 악순환
(구조적 요인으로 해결이 쉽지 않음)

경기침체와 경제위기

-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억제를 위해 가능한 긴축금융정책 모두 사용 : 지준율, 대출 규제, 금리인상
- 외환위기 10년 : 외환위기 전과 비슷 : 외환위기 시 (기업부채억제를 위해 긴축금융정책 사용 : 경기침체로 자본유출)
- 대통령선거 해 경기침체 경계 필요

정치적 경기변동

- 미국 중임제 : 대선 전 2년 부양 대선 후 2년 침체 : 재선목적
- 한국 : 5년 단임제 : 집권 후 3-4년 경기부양, 임기 마지막 1년 경기침체 : 재선을 할 필요가 없음. 마지막 해 : 경제위기 초래
- 노태우, 김영삼 정부 : 임기 마지막해 경기침체
- 김대중 정부 : 임기 마지막 해 경기부양 (경제성장율 : 2001년 3.6%, 2002년 7.0%, 2003년 3.1%)
- 노무현 정부 : 임기 마지막 해 경기침체 : 긴축금융정책 사용 : 경제위기 가능성

경기활성화 방안

(1) 수요중심의 경기정책에서 공급중심 정책으로 전환

-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
- 고금리, 저환율 하에서 법인세 인하 및 기업규제완화로 기업수익율 높여줌 : 설비투자 및 R&D 투자증대
- 반 기업정서 불식, 대미관계 회복

(2) 불법적 노사분쟁 개선 : 제도적 개선

(3) 제조업 부활을 통해 고용흡수 : 정부지원 필요

(4)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임

- 한국 1.08명으로 OECD 중 가장 낮음, OECD 평균 1.6명

II.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대출

부동산 가격상승 원인

- 재건축 : 2002년 경기부양 위해 허용 (이익집단의 역할 중요)
- 과잉유동성 : 저금리와 고환율 정책으로 과잉유동성 : 경상수지 흑자 : 2003년 120억달러, 2004년 280억달러, 2005년 165억달러
- 기업도시, 행복도시 등 정부재정 지출
- 공급부족 : 신도시 건설하지 않음
- 원유가 상승에 의한 분양원가 상승
- 제조업 투자부진으로 대체 투자처

부동산 가격 버블 붕괴 가능성

- 강남 32평 아파트 기준(2억 5천원(2002년) – 6억 5천 만원(2003년)-13억원(2006년) :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임.
- 강남, 강북간 가격 차이 : 4배 이상
- 지방 건축 경기 불황
- 강도 높은 긴축금융정책 사용시 버블붕괴 가능성
- 버블붕괴 시 금융기관 부실로 금융위기

부동산 가격과 통화량

- 통화량의 증가경로
 - (1) 저금리 : 대출증가 (유동성증가)
 - (2) 고환율 : 경상수지 흑자(유동성 증가)
 - (3) 정부부채 : 재정적 지출 (유동성 증가)
- 부동산 가격안정 위해 적절한 환율, 통화정책조
합 필요
- 경상수지 흑자로 과잉 유동성시 공급증가로 해
결 : 노태우 정부 시 신도시 개발로 공급증가

부동산 가격안정 방안

- 점진적인 유동성흡수정책, 과도한 긴축정책 경계
- 재건축 기대 불식 (허용 년한 20년에서 40년으로) :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
- 투기수요를 정상적인 수요로 오해 : 수요와 공급의 법칙 적용 잘못
- 교통여건이 좋은 신도시 개발로 공급확대
- 양도소득세 인하(미국의 경우 2주택자의 경우도 50만 달러 면세, 양도소득세율 15-17%)
- 분양가 상승억제

가계대출과 금융위기

-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부실이 가계 부실로 전가됨.
- 가계부실의 원인 : 생계형 47%, 부동산구입용 54%
-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지속시 가계대출 부실로 금융위기 우려됨
- 해결방법 : 경기활성화와 부동산가격 안정

Ⅲ. 소득 불공평도 심화와 복지

소득 격차의 원인

- 산업구조의 문제 : 제조업의 쇠퇴와 정보화 산업의 부상
- 경기침체
- 부동산가격 상승
- 수출과 내수의 격차

(구조적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음)

소득 불공평의 영향

- 소득 불공평도가 높아질수록 진보성향으로 회귀
- 민족주의 경향 : 대외개방 반대
- 노동쟁의 심화, 투자부진으로 경기침체의 악순환 속으로 들어감
- 이익집단의 역할 증대

소득 불공평의 해결방안

- 경기활성화, 기업의 투자환경개선
- 부동산 가격안정 : 재건축 금지(투기이익 차단)
- 이익집단의 역할 최소화 : 제도적 장치 필요
- 복지 확대 및 연금개혁 필요
- 복지 vs. 경기
 - 복지확충 하면 경기활성화 인식전환 필요
 - 경기활성화 되면 복지 확충 됨(세수증대로 복지 지출 증대)



IV. 대외 경제정책 방향

무역정책

- 한미 FTA 를 통한 수출확대
 - 이익집단의 역할 최소화 필요
 -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에 득이 됨을 인식
 - 손실집단(농민)에 대한 보상 필요
- 경상수지 흑자 유지
- 미국과의 교역 중요성 인식 필요 : 대미 무역수지 흑자시 전체무역수지 흑자 : 대미무역수지 적자시 : 외환위기
- 동아시아 무역블럭 준비

환율 및 자본시장정책

- 환율안정과 적정환율 유지
- 경기침체, 세율인상,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자본이탈에 대비 필요
- 외국자본의 과다 유입 경계 (주식시장 점유율 36%, 외국은 15%)
- 자본시장개방에 대한 제도정비 : 외국자본의 기업소유에 대한 제도정비 필요
- 동아시아 통화협력 대비



V. 정책 성공을 위한 선택

역대 정부의 경제정책

- 전두환 정부 : 경제성장과 기업구조 조정
- 노태우 정부 : 확대정책으로 경상수지 적자, 부동산가격 상승, 기업경쟁력 약화 : 구조조정 시도 실패
- 김영삼 정부 : 구조조정보다 경기부양 : 임기 1년 전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시도 : 경기침체와 자본이탈 : 외환위기
- 김대중 정부 : 임기 1년 전 과도한 경기부양 : 신용카드 남발과 재건축 허용 : 부동산가격 상승 및 소득 불공평 심화
- 노무현 정부 :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양극화 심화

정책성공을 위한 선택

- 올바른 경제참모의 선택
- 노사분규 개선, 제도적 정비 필요
- 초.중등 교육의 중요성 : 이념교육 경계
- 이익집단의 역할 배제
- 부동산 가격안정으로 소득격차 축소
- 대미관계 :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에 중요
- 비대한 정부와 공공부문 축소 및 개선
- 고령화에 대한 대비 : 연금제도 개선



감사합니다.